시중 유통 생·선식 3개 중 1개는 위생 불량

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"30개 제품 중 12개서 식중독균·대장균 검출"

대형마트 등 즉석 제품도 기준치 이상 세균 발견

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해야

■ 대장균·식중독균 검출 업체

상품명(제조원)

- 대 스프라우트 생식(심포니네이쳐)
- 즉석판매제조선식(롯데백화점 분당점) 교 즉석판매제조선식(AK백화점 분당점) 자연생식(마임)
- 내몸에 좋은 발아 생식(서원조합) 식 맛있는 자연곡물 생식(오행생식)
- 아침을 여는 편해식 생식(찬슬)
- 즉석판매제조선식(롯데마트 수지점) (신세계백화점 경기점)

유기농선식 든든한 아침만찬(청오)

시중에 유통되는 생식과 선식 제품의 3 개 중 1개는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 타났다. 특히 유명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서 판매되는 즉석 제조 선식 제품에서도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

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생식 (15개)과 선식(15개) 30개 제품의 위생도 를 시험한 결과,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1. 2~20배를 초과하는 식중독균(바실러스 세레우스)이 나왔고,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.

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심포니네이쳐 (판매원)의 '스프라우트 생식', 롯데백화점 분당점의 '즉석 판매 제조 선식', AK백화



광주 지역 한 유통업체의 선식 판매장. 이 업체는 즉석 판매 제조 선식의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이 확인된 지난 24일부터 분말 형태 의 모든 선식에 대한 진열·판매를 중단했다.

점 분당점의 '즉석 판매 제조 선식' 등이다.

식중독균(바실러스 세레우스)이 검출된 제품은 '자연생식'(마임), '내몸에 좋은 발 아생식'(서원조합), '맛있는 자연곡물 생 식'(오행생식), '아침을 여는 편해식생식' (찬슬), '즉석 판매 제조 선식'(롯데마트 수 지점, 신세계백화점 경기점), '블랙생선식' (얼쑤), '유기농선식 든든한 아침만찬'(청

특히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, 신세계백 화점, AK백화점 등 유명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인 즉석 제조 선식 8개 중 4개 제품이 식중독균 및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.

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해 판 매하는 선식의 경우, '즉석 판매 제조식품' 으로 분류돼 개별 제품에 원재료 성분・유 통기한 등의 필수 표시사항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. 소비자원은 "선식과 같이 소비자 가 구입 후 비교적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 하는 '즉석 판매 제조식품'도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표시제도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"고 설명했다.

한편 곰팡이독소 시험 결과, 30개 중 1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이 20.85~85.21µg/kg 수준으로 검출됐다.

생・선식 제품에는 곰팡이독소 기준이 별도로 없어 국내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

(200µg/kg)와 비교해 보면 안전한 수준이 지만, 이 중 3개 제품은 유럽연합(EU)의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(75µg/kg)를 초과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.

소비자원은 "곰팡이독소는 세계보건기 구(WHO)에서 잔류농약보다 위해한 물질 로 간주하고 있다"며 "생·선식과 같이 곡류・두류・견과류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해, 이들 제품 에 대한 곰팡이독소 개별기준을 신설할 필 요가 있다"고 설명했다.

소비자원은 기준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 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완료했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명품 좋아하는 한국인

세금은 "싫어"

인천공항세관 미신고 적발 건수 일평균 200건…5년간 꾸준히 증가 명품 가방〉주류〉의약품〉담배 순

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신 고, 통관제한 등의 이유로 세관에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명품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.

2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09~ 2013년 여름 휴가철인 7월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행객으로부터 유치한 '주요 물품' 9만9천399건 중 명품가방이 총 2 만7297건(27.5%)으로 가장 많았다.

세관이 분류한 주요 물품은 가방(명 품 포함), 시계(명품 포함), 액세서리·벨 트 등 기타명품, 의약품, 주류, 담배, 화 장품·향수류다.

세관에 유치된 명품가방 수는 2009년 1436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10년 4130 건, 2011년 4977건, 2012년 7632건에 이 어 작년에는 9122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 히 증가했다.

작년만 보면 하루 평균 200여건이 적 발된 셈이다.

관세법에 따라 해외 여행자가 면세 범 위(미화 400달러)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세액의 30% 를 추가로 내야 한다.

여행객이 가산세 납부를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고 임시보관을 요청하면 세관이 해당 물 품을 유치한다.

해외에서 이른바 '짝퉁'을 사서 들어

오면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유치한다.

같은 기간 명품 시계와 벨트 등 기타 명품 유치 건수는 총 6167건이었다. 이 역시 500건(2009년)에서 1137건(2010 년), 1243건(2011년), 1496건(2012년), 1791건(작년)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.

명품류 외에 주류(2만765건), 불법의 약품(2만5780건), 담배(5651건), 화장 품·향수류(1652건) 등도 다수 적발됐다. 주류와 담배, 화장품·향수류는 여행객 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세관은 설명했

고가 명품류 등의 미신고 적발·유치 가 늘면서 세관이 징수한 가산세 역시 2009년 5천500만원에서 2010년 3억2천 600만원, 2011년 5억6천900만원, 2012 년 11억8천300만원, 작년 20억8천200만 원 등으로 늘었다. 2011년부터는 매해 전년의 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.

세관 관계자는 "고가 사치품의 미신 고 사례가 휴가철 특히 빈번하다"며 "불 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꼭 자진 신고해달라"고 당부했다.

영유아·건강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올 12월부터 단계적 시행

유통·판매·소비단계 파악 가능 조제분유 등 축산물은 내년까지

올해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을 시작으로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 템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.

이렇게 되면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 통, 판매,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 비자가 식품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

단 및 회수·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식품업계 자 율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

먼저 식약처는 식품 위해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단 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

제조·수입업체는 2013년 품목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매출액 50억원 이상 품목 은 올해 12월부터, 연매출액 50억원 미만 품목은 2017년말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 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.

영업장 면적이 300m²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, 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하 도록 의무화했다.

식약처는 조제분유 등 축산물에 대해서 도 매출규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단

大山프리모가발

계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의무 도 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.

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제 조·판매업체는 소비자에게 파는 최소 판 매단위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이력추적 관리번호와 로고를 반드시 부착하고 이를 식품 이력관리 사이트(www.tfood.go. kr)에 입력해야 한다.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의 기본정보와 원재료 정보, 출하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금감원, 서류조작 대출 광고 주의보 발령

광고게시글 470개 적발

이용자도 공범으로 처벌

금융당국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 류조작 사기대출(일명 작업 대출) 광고 가 퍼지자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지난 23 일자로 발령했다.

작업 대출은 불법 업자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소득, 재직, 통장 거래 내용 등 개인 정보를 위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서 금융사에서 대출받 도록 해주는 수법이다.

금감원은 최근 사기대출 조장, 대출서 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인터넷 광고게시글 470개를 적발해 수 사 기관에 통보했다.

작업 대출 광고를 이용하면 불법 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마저 형사 처벌을 받 을 수 있다.

불법 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금의 30~80%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니 대출금 전액을 뺏길 수 있다. 작업 대출 은 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 대출이 므로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.

금감원은 불법 카페·블로그에 대해서 는 포털업체에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에 심의·삭제를 요구했다.

금융사에는 대출 취급 시 재직 증명, 소득 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



원장 이 수채 011-607-5330

